

조직 쇠신하고, 농가에 2200억 지원... 농협 대전환 본격화

감사 조직 독립성 높여 투명성 강화
외부위원 중심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첨단기술 활용한 농업 경쟁력 강화

농협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부문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한다. 인사 부문의 혁신 및 적자 일로의 계열사 체질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도 도입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조직 쇠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실행하고, 외부의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한다는 목표다. 개혁안에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농협 대전환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쇠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가 2개의 주요 축이다. 이어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의 정착을 지향하게 된다.

우선 '중앙회 운영 쇠신'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한다. 또 중앙회 기능을 농업인·조합원과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지원 역량의 강화를 추진한다.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프로젝트 '힘내라! 우리 농업'을 추진한다. 생산비와 유통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실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와 연계해, 햇빛연금 확산 및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확

산과 AI 도축로봇 도입 등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고, 농축산물 판매 역량을 강화해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도 실시한다. 총 887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감면을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발맞춰 전북권에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금융지원 거점인 올해 3분기 중 설치할 계획이다. 이른바 'NH금융허브'(가칭)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농협 대전환은 농협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조기 이행은 물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16개 실천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업인·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공정위, 미래에셋·코빗 기업결합 승인

금융권 첫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공정위 "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대형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가 탄생했다. 독과점 체제가 공고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심사를 진행했다. 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 출시 시 증권 시장 내 진입장벽 유발 여부, 향후 가상자산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이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결론 내렸다. 당사회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국내 시장은 1위 업비트(약 69%)와 2위 빗썸(약 28%)이

97%를 독식하고 있으며, 코인원(약 2%), 코빗(약 0.5%), 고팍스(약 0.1%) 순으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심하다.

공정위는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고, 시장의 집중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고 심사 결과 이유를 설명했다.

비록 현재 점유율은 낮지만,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고착화된 시장 구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역안보서 산업안보로... 정부 전략 전환

산업부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국제공조 중심의 '무역안보'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주도적 '산업안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양 실장은 "기존의 무역안보가 국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 국제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수출통제,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안보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

는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무역안보포럼'이 정부에 '무역안보 2.0을 위한 제안'을 전달했다. 포럼은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중심 무역안보 재정립, ▲적극적 무역안보 협상전략 추진, ▲정부·민간 공동 무역안보 책임 이행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향후 제도 설계에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기술 보호 조치와 수출통제로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맞춤형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바우처 사업 내에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를 신설하고 애로기업 대상 신규 지원을 시작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산업부 수출허가 담당자, 주요 로펌, 무역안보 관리원 등이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집단민원도 선제 대응... 범정부 갈등관리

권익위, 한국갈등학회 학술대회 주최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변전설비 및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UTECH)에서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 국무조정실,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학계

와 관계 부처,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 기획 세션을 통해 그간 사후 수습에 치중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권익위는 발제를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구조에 빛대 이해관계가 중첩된 집단 갈등을 교섭·협상·조정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해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집단갈등 예측 시 관계 기관이 조기에 개입해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정부 공동책임 구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유형과 조정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외국인 장기체류 감소 비전문인력 입국도 위축

데이터처, 2025 국제인구이동통계

국내에 입국해 90일을 넘겨 체류한 외국인 수가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비전문인력을 비롯해 단기방문 체류자격 입국자 등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급증하던 외국인 입국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수는 42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000명(-5.1%) 줄었다. 이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상주지를 옮긴 외국인을 집계한 수치다. 외국인 입국자는 2018년 49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43만8000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23만3000명, 2021년 22만1000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바다 폐로프, 고부가가치 재생로프 변신

해양환경공단, 자원순환 업무협약

해양환경공단이 민간기업과의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추진한다.

공단은 최근 동양제강과 해양폐기물(합성로프)의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이를 재생로프로 재활용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공단의 안정적인 수거 인프라'와 '민간의 고도화된 재생 가공 기술'이 결합한 사례다. 실질적인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해양에서 수거된 합성로프는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혼합 재질로 구성돼 재활용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소각 처리돼 왔다. 이에 양측은 폐로프를 친환경 자원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해양환경공단과 동양제강 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업무협약식.

공단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집하장에 반입되는 폐로프를 보관·관리한 뒤 제공한다. 동양제강은 인도받은 폐로프를 분류한 후 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활용해 국제 재활용 표준(GRS) 인증을 획득한 재생로프를 가공·생산하게 된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순환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